

與, 이태원 참사·빈곤 포르노 논란 공세에 '원팀'으로 반격

국면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 풀이
야권 추진 국정조사 거부 명분
주호영 "민주당, 참사 정쟁화"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빈곤 포르노' 논란 공세에 원팀(one-team)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활동과 당무감사 예고로 친윤·비윤계 간 격과 갈등이 불거졌지만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10·29 참사 책임론은 피하면서, 최근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이 생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참사 직후 불거진 정부 책임론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참사 관련 국정조사 거부 명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도 거의 모두 명단 공개에 반대했고, 주한 대사관 한 곳은 공식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사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사실상 민주당을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공범'으로 지목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속내는 어떻게든 이번 참사를 정쟁화해서 불순한 정치적 잇속을 채우려는 것"이라며 "세월호에서와 같이 안

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고 낭비하는 최악의 대가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실명 공개를 공식 주장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정작 사고는 커녕 아무런 말이 없다. 국가적인 슬픔을 두고 가볍게 그 지없는 정치적인 언행과 선동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당시 동

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 집에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핀 데 대해 '빈곤 포르노', '오드리 햅번 코스프레'라며 비판한 데 대한 반격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런 용어가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장 최고위원이 지난 2021년 2월 6일 '취약 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행사 참여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장 최고위원 시각에서는 셀프 '빈곤 포르노' 화보라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팀 기조로 민주당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당내 갈등 불씨가 된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와 당무감사 등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다.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룰 세팅을 해서 전당대회 준비해야 하고, 심판이나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게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당권 도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김병준 비대위도 당무감사를 했고, 1년에 1회 정기 당무감사를 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며 당 일각에서 제기된 당무감사 비판 여론을 해명했다.

이어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당협 평가를 가지고 당협위원장이 교체되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다. 반드시 당협위원장 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오봉역 찾은 이재명 "안전 위해 이윤 양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사고 원인·작업조 구성 등 질문
"구조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아"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무궁화호 탈선 사고,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까지 연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봉역을 찾아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소영·조오섬·임오경 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오봉역 차라기지



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철도노조 조합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봉역 관계자의 사과 브리핑을 들은 이 대표는 "요즘 같이 첨단설비가 발전한 사회에서 대규모 오작동, 오판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1번 선로로 가야 하는 차량이 2번 선로로 되돌아 갔다는 것 아닌가. 왜 그런 건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고 당시 '4인 1조', '3인 1조'로 작업조가 구성되지 않고 '2인 1조'로 구성된 이유도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살려 갔던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된 참혹한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비용보다 이윤, 비용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고 산재 사망자 수도 아주 오랫동안 높게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노동에 대한 인

식,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와 비용, 이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며 "누군가 생명을 잃어도 특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조와 문화가 정착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과 이윤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입환(차량 연결·분리) 업무를 하던 코레일 수송 직원 A씨는 선로 전환기가 오작동 하면서 시멘트 화차에 치어 사망했다. 올해 코레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총 4

명이고 최근 10년간 A씨와 같은 입환 업무를 하다 죽은 노동자는 총 4명이였다.

A씨의 유족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일을 맞아 집에 온다던 오빠가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울분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표도 해당 사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하며 "같이 일 하던 사람이 1명만 더 있었다면, 열차를 피할 공간이 있었다면, 올해 4건이나 발생한 사망사고에 회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던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정당지지도 33%... 국민의힘 오차범위 내 앞서

대통령 긍정평가 29%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도 앞섰다.

전국지표조사 리포트(NBS)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조사(응답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33%, 국민의힘은 30%, 정의당 4% 태도를 유보하겠다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선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을 더 지

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29%로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번째 20%대 긍정 평가 응답이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62%다. 전체 응답자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 '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잘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

어서(36%)'가 제일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7%)', '결단력이 있어서(24%)', '국민과 소통을 잘 해서(13%)' 등을 꼽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41%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45%,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4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 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했으며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해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박태홍 기자

내년도 경사노위 운영비 1억 삭감안 의결

與野, 인건비 12억400만원은 통과

여야는 내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비를 1억여원 감액하는 예산안을 17일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노위는 내년도 경사노위 운영비를 정부안인 34억1000만원에서 32억9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인건비 12억400만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다.

한노위는 운영비 감액 이유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 운영 경비를 제외한 본 위원회 운영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 전액 삭

감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난색으로 표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한노위 소소위원회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유지 필요성에 입각해 인건비를 유지하되 운영비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한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오후 2시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임금 근로 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는 쟁의대상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며 "이 개정안은 헌법이 약속한 노동3권이 손해배상소송과 가입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책임 입법"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